18대 총장 선임, 구성원 참여는 어디까지? 아쉬운 후보 검증 절차 개선 목소리도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 **제18대 총장선임 총장 후보, 누가 어떻게 고를까?** – 구성원 대표 의견



아쉬운 후보 검증 절차 개선 목소리도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제18대 총장 선임을 1년여 앞두고 양 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에서 학생 투표권 도입이 공통 공약으로 나왔다. 지난 호에서는 제16대와 제17대 총장 선임 방식과 변화된 과정을 돌아봤다. 이번 호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짚는다. 우선 총장 후보를 추리는 과정에 학생과 교직원의 뜻은 어떻게 반영될지, 두 번째는 구성원은 후보의 대학 운영계획을 어디까지 확인하고 직접 물을 수 있을지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 후보와 직원 노조 · 교수의회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다른 사립대의 사례를 함께 살폈다.

대표 교체기 맞은 총학생회 · 직원 노조 · 교수의회

각 주체가 제안하는 구성원들 간 투표 반영 비율과 참여 범위

올해 양캠에서는 차기 총학생회 장단을, 교수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을 뽑는다. 직원 노조인 경희대학교 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경희학원지부도 각각 대표 선거를 치른다.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앵커' 최지현(정치외교학 2023) 정후보는 학생 직접투표권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국제캠 총학생회와 공동 대응 특별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국제캠 선거운동본부 '코드' 김민성(골프산업학 2022) 정후보는 지난 16일 정책공청회에서 학생 표를 25% 반영해 총장 후보의 최종 순위를 정하자고 했다. 이는 교수·직원·학생·이사회의 투표 결과를 합산해 종합 1위에 오른 후보를 이사회가 총장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장을 임용할 권한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있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을 임용할 때 이사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학생 표 25%를 반영하는 방안을 학교법인과 어떻게 협의할지 묻는 질문에 김 정후보는 "당선이 된다면 임기 초 양 캠퍼스 학생들의 공동 요구안을 마련한 뒤 교수·직원 대표, 학교법인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법인 측은 아직 제18대 총장 선임 방식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제24대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 출마한 테크노경영대학원 이광봉 행정실장은 "구성원들이 후보 추천 과정에서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선임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선거에 출마한 학생지원센터 한상 차장은 "집단별 투표 반영 비율을 협의한 뒤 교수·직원·학생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재선된 전국대학노동조합 김종민 경희학원지부장은 "제17대 총장 선임 당시의 후보 공개모집과 전문 심사, 숙의를 통한 후보 압축 절차를 유지하되 최종 후보 선정에 구성원 직접투표 결과를 반영하자"고 말했다.

제16대엔 구성원 투표 제17대엔 대표 추천

학생 대표 참여에도 부족했던 학생 의견 수렴 기회

제16대 총장 선임 때 학생과 직원은 이사회에 추천할 후보 세 명 중 한 명을 투표로 정했다. 이 한 자리를 정하는 데 학생과 직원의 투표 결과가 각각 50%씩 반영됐다. 나머지 두 명은 교원 투표로 정했고 세 후보 가운데 누구를 총장으로 선임할지는 이사회가 결정했다.

제16대 총장 선임 과정에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에 각 집단의 대표가 몇 명씩 참여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교원과 직원의 생각은 달랐다. 당시 총추위에는 교원 대표 15명과 법인·직원·학생·동문 대표 각 5명이 참여했다. 2023년 교수의회가 교원과 직원 3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당시 총추위 구성 비율을 두고 직원 응답자의 61%, 교원 응답자의 36%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관련기사: 총장후보 선거 설문 교·직원 의견 보니/대학주보 1709호/2023.09.18.).

제17대 총장 선임 과정에는 구성원 직접투표가 빠지고 이사·교수·직원·학생·동문 각 5명이 총추위에 참여해 예비 후보를 추천했다.

총추위의 학생과 교수 참여 비율은 대학마다 달랐다. 서강대는 2024년 제17대 총장 선임 당시 위원 29명 가운데 교수 대표가 15명, 학생 대표가 2명이었다. 직원·동문·예수회 대표는 각 4명이었다. 올해 제22대 총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는 규정상 위원 30명 중 교수 대표가 15명, 학생 대표가 3명이다.

우리학교는 총추위에 참여하는 학생대표가 5명으로 절대적 숫자는 비교적 많았지만, 선임 방식에 의견을 낼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2023년 9월 국제캠 총학생회는 대동제에서 사흘간 '학생이 바라는 총장상'을 물었고, 당시 문정식(중국어학 2018) 총학생회장이 축제 마지막 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한 달 뒤 구성원 대표들이 선임 방식을 논의했을 때 최종안에 대한 학생 의견을 다시 묻는 절차는 없었다.

당시 김도균 교수의회 의장은 "구성원 대표 간담회부터 이사회 확정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17대 후보 명단 공개에도 운영계획 검증엔 한계

제18대 후보에게 직접 묻는 정책간담회 · 공개토론회 제안

제17대 총장 선임 당시 법인은 후보자 보호를 이유로 초빙·공모 단계에서 후보 명단과 후보별 정책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반 구성원이 최종 후보 다섯 명의 이름을 확인한 건 2023년 12월, 숙의위원회 심사가 끝나고 행정지원단이 전체 메일을 보냈을 때였다. 이후에도 구성원이 선임 전에 후보의 대학 운영계획을 직접 듣고 질문할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후보를 심사한 추천위원들마저도 심사를 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당시 한 추천위원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추진하려는 정책을 담은 자료를 본부측에 요청하고 나서야 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추천위원은 "추가로 받은 자료도 2~3장 분량의 자기 추천 수준 내용이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비공개 원칙', 구성원 참여 수준 낮춰/대학주보 1716호/2024.01.24.).

제16대 총장 선임 때는 구성원이 같은 질문에 후보들이 어떻게 답하는지 직접 비교할 기회가 있었다. 2019년 11월 국제캠 정책발표회에서 당시 전완주(일본어학 2011) 총학생회장은 이공계와 예체능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을 지원하려면 예산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물었다. 이어 후보들은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재정을 확충할 방안을 두고 자유토론을 벌였고, 구성원들이 사전에 총추위 행정지원단에 이메일로 보낸 질문에도 답했다.

이화여대는 2024년 제18대 총장 후보 추천 선거에서 교원·학생·직원을 대상으로 각각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영상은 투표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현장에 가지 못한 구성원도 후보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김 지부장은 직원들이 후보에게 인사제도와 노동조건을 직접 물을 수 있는 공개 정책토론회를 제안했다.

또한 교수의회 김양진(국어국문학) 의장도 학교가 온라인에 후보별 공약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 공약을 두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